

현대평화이론의 관점에서 본 김대중의 평화관

김용철 | 전남대학교

| 국문요약 |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이 햇볕정책이나 외교정책에 초점을 맞춰 김대중의 평화관을 분석했다면, 이 글은 '한반도 평화론'뿐만 아니라 '대중경제론'과 '지구적 민주주의'로 분석의 대상을 넓혀 그의 평화와 폭력에 대한 인식과 철학을 재조명한다. 분석의 결과는 그의 평화철학이 남북관계 혹은 국가안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국 차원의 사회공동체와 지구적 차원의 인류공동체 등 다양한 수준을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가 상정하는 평화란 전쟁억지 및 교류·협력을 통한 평화통일뿐만 아니라, 정신적·신체적 위해, 구조적 수탈 및 억압, 문화·종교·인종적 차별, 그리고 자연의 훼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폭력들을 비폭력적으로 제어하는 과정이자 제어된 상태를 의미했다. 이를 위해, 그는 민주적 시장경제의 확산, 공동체주의적 덕성의 함양, 그리고 전 인류적 차원에서 재개념화된 민주주의의 확장을 역설했다. 요컨대, 그에게 평화란 선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준비하고 만들어야 할 대상이었다.

주제어 | 김대중, 평화, 민주적 시장경제, 공동체주의적 덕성, 지구적 민주주의

1. 서론

정치인 김대중은 우리 현대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긴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권위주의 통치에 맞서 싸운 민주화의 지도자로, 그리고 외환위기로부터 한국경제를 구해낸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는 나름의 평화통일론을 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의 긴장완화와 화해를 위해 헌신했던 정치인이기도 했다. 그 공로로, 그는 2000년 12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김대중은 ‘평화주의자’로 기억되기도 한다.

하지만 김대중의 ‘평화’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가치의 세계를 담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평화를 달성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은 대북정책 혹은 외교철학의 관점에서 그의 평화사상을 검토하고 있다.¹⁾ 그 결과, 김대중의 평화사상 연구는 그의 ‘햇볕정책’ 혹은 동북아외교정책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 경향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가 김대중이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자신만의 이론을 개발·정립했던 유일한 정치인이자, 남북분단 이래 처음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킨 정치지도자였다는 점이다. 즉 한반도 평화통일론은 그의 트레이드마크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평화’란 ‘전쟁’의 반대어로 인식되는 일반적인 경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평화를 국가 간 전쟁이 없는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 경우, 김대중의 평화사상에 대한 연구는 남북통일과 전쟁억지의 문제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평화는 단순히 전쟁의 부재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평화의 반의어는 ‘폭력’이다. 전쟁은 여러 형태의 폭력들 가운데 하나일

1) 김대중이 추구했던 대북·외교정책의 내용적 특징 혹은 철학에 대해, 정경환(2011)은 “비현실적·환상적 이상주의”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문정인(2015)은 구성주의와 현실주의가 결합된 “자유주의”로, 서정민(2015)은 “실용주의”로, 김학재 (2017)는 “창의적 낙관주의”로, 노명환(2018)은 “성리학적 구성주의”로, 황보윤식(2021)은 “민본주의”로 파악한다.

뿐이다. 폭력은 그것이 발생하는 수준 - 개인, 사회공동체, 세계 - 에 따라 상해와 살인, 차별과 수탈, 종속과 전쟁 등 다양한 형태를 띤다(Adolf 2009). 따라서 평화는 사용자 혹은 연구자의 논의 수준에 따라 다양한 개념과 의미로 발현된다 (Boulding 1978, 3; Jarstad et al. 2010; Johansson and Saati 2020).

문제는 김대중이 남북관계 혹은 전쟁억지에만 한정시켜 평화를 얘기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는 전쟁뿐만 아니라, 신체적 위해, 심리적 상처, 집단적 차별, 자연파괴 등 다양한 형태를 폭력으로 인식한 정치인이다. 또한 폭력의 해소를 위해 그는 평소 개인적 차원에서 ‘용서’와 ‘화해’를, 사회적 차원에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를,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상호협력’과 ‘공존공영’을 역설해온 인물이다. 이렇게 볼 때, 김대중의 평화관을 대북정책 및 외교의 맥락에서만 이해하는 것은 그의 평화에 대한 인식과 철학을 자칫 축소 혹은 왜곡시킬 소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이 글은 기존연구와 달리 다양한 수준에서 그의 평화관을 재조명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장에서 다양한 평화이론들을 검토할 것이다. 이는 김대중의 평화사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 이론적 준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다. 3장에서는 폭력에 대한 인식과 처방이라는 관점에서, 그가 평소 주창했던 대중경제론, 한반도 평화론, 그리고 지구적 민주주의를 검토·분석할 것이다. 이는 다차원적 수준에서 그의 평화철학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의 평화사상의 특징들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그의 평화사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함의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II. 평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관점들

평화의 개념, 평화의 의미세계, 평화의 조건과 성취전략 등에 대한 논의들은 최근 국제관계학 및 평화학 등 여러 영역에서 진행되어 왔다. 구체적으로, 국제

관계학의 ‘승자평화론’과 ‘자유평화론,’ 맑시스트들이 주장하는 ‘계급 없는 평화론,’ 그리고 갈통의 ‘적극적 평화론’ 등이 그것이다. 이들은 이론적 패러다임에 따라 다양한 평화관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먼저, 승자평화론(victor's peace)은 국제관계학의 현실주의 이론가들이 제시하는 평화이론이다. 이에 의하면, 평화란 ‘전쟁 없는 국제질서’를 의미하며, 이는 기본적으로 패권국가들의 설계와 장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본다(Richmond 2006, 376). 승자평화론은 국제관계를 약육강식의 논리가 지배하는 ‘무정부’ 체제라는 ‘비관적인’ 현실인식에 바탕한다. 즉 국제정치는 국내정치와 달리 상위의 중앙권위체가 부재하기 때문에, 전쟁가능성이 항존하는 정글상태에 가까운 질서라는 것이다(Waltz 1979). 따라서 국제무대에서 물리적인 힘은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핵심 조건이 되며,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금언이 국제정치의 지배적 원칙으로 작동한다(Wendt 2009, 371).

현실주의자들의 인식은 홉스(Thomas Hobbes)가 상정했던 ‘자연상태’와 유사하다. 홉스는 중앙권위체가 부재한 자연상태에서 인간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보았다. 홉스의 극복 방안은 자연상태의 개인들이 자신의 자연권을 중앙정부에 이양하여 개인의 안전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Held 1996, 28-34). 그러나 국제정치에는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다. 때문에 국제관계는 국가들 스스로가 자신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자조적 질서일 수밖에 없다. 개별 국가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스스로 무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군비확충 과정은 또 다른 경쟁과 전쟁을 유발하기 쉽다. 즉 자국의 생존을 위한 군사력 강화가 다른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이른바 ‘안보딜레마’ 현상을 발생시킨다(Jervis 1978).

현실주의자들의 처방은 무정부적 국제질서에 어떻게 안정성을 부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패권안정이론은 전쟁 없는 국제질서를 위해 ‘안정자(stabilizer)’ 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패권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Gilpin 1981; Kindleberger 1986), 세력균형이론은 국가 간의 ‘세력균형’의 유

지(Morgenthau 1973) 혹은 두 개의 강대국이 국제질서를 이끄는 ‘양극체제(bipolar system)’의 존재(Waltz 1979)가 전쟁억지에 기여한다고 본다. 요컨대, 현실주의자들에게 평화란 ‘전쟁 없는 상태’이며, 전쟁억지의 주요 행위자는 기본적으로 강대국들이다. 이들은 평화의 유지를 위해 물리적 힘에 바탕한 강대국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둘째, 자유평화론(liberal peace)이다. 이는 국제관계학의 자유주의 이론가들에 의해 주창된 평화이론으로, 민주주의 제도와 시장경제의 확산을 평화의 조건으로 제시한다. 이 점에서 자유평화론은, 군사력에 기초한 ‘힘의 균형’을 통해 전쟁가능성의 제어를 주장하는 승자평화론과 달리, 국제평화에 대해 다분히 낙관적이다. 이러한 차이는 자유평화론이 국제관계를 단순히 전쟁가능성이 상존하는 질서로 이해하기보다는 전쟁과 평화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질서로 보기 때문이다. 즉 이들은 국제관계를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정글”이 아닌 평화를 심고 가꿀 수 있는 “정원”(garden)으로 인식한다(Doyle 1997, 19).

이러한 인식은 칸트(Immanuel Kant)의 자유주의적 평화사상에 기초한다. 그는 그의 저서 <영구 평화론>에서 무정부적 국제질서는 공화정 헌법(민주주의)과 경제적 상업정신(경제협력)에 기반한 민주적 정치·경제체제 국가들의 ‘평화연합’(pacific union)에 의해 극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Kant 2015). 이 같은 칸트의 주장은 최근 ‘공화정’에 주목하는 ‘민주평화론’(democratic peace)과 ‘경제적 상업정신’에 주목하는 ‘경제평화론’(capitalist peace)으로 분화되고 있다.

먼저,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체제 그 자체가 국가 간 평화구축의 추동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요컨대,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 간의 전쟁가능성은 여전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체제에는 전쟁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지워질 부담(예: 시민들의 자유와 재산의 침해)을 회피하려는 제도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는 반면, 비민주주의 체제에는 그러한 기제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들은 폭력적 수단에 의존하기보다는 평화적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하

지만,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 간의 갈등은 폭력적 상황으로 치닫기 쉽다는 것이다(Maoz 1989; Maoz and Russett 1992; Owen 1994). 이에 비해, 경제평화론은 시장경제를 전쟁억지의 핵심 요인으로 파악한다. 즉 개방경제, 무역, 해외투자, 그리고 사유재산의 확대와 같은 자본주의 요소들이 평화의 추동력임을 강조한다. 달리 표현하면, 높은 수준의 경제적 자유를 향유하는 국가들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전쟁보다는 시장을 통해 자국의 부족한 자원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계약관계에 기초한 경제활동은 국가 간의 공통적 이해를 촉진하여 상호의존과 신뢰관계를 제고시키기 때문이다(Gartzke 2007; Weede 1996).

셋째, 맑시스트 이론가들은 ‘계급 없는 평화’(classless peace)를 상정한다. 이들은 자본주의 질서를 기본적으로 소수 엘리트와 자본가들의 다수 노동자들에 대한 경제적 착취와 정치적 지배를 구조화시킨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정치경제질서로 파악한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국내의 사회관계는 물론이고 국제관계를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에 휩싸이게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자본주의 질서가 존재하는 한, 평화는 존재할 수 없다고 본다(Richmond 2008, 69).

이 같은 인식은 맑스(Karl Marx)와 레닌(V. I. Lenin)의 사상에 바탕한다. 이들에 의하면, 자본주의는 지배계급(자본가)의 잉여창출 욕망과 피지배계급(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는 계급적 ‘양극화’와 피지배계급의 ‘궁핍화’를 필히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를 다수의 자유와 평등을 억압하는 질서이며 구조적으로 평화가 불가능한 질서로 파악한다. 즉 이들에게 평화란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상태로, 그것은 계급착취의 철폐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다(Richmond 2008, 69-72). 따라서 이들은 계급착취의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고 평화를 성취하는 수단으로써 ‘폭력혁명’을 ‘불가피한 방어전쟁’이자, 심지어 ‘정의로운 전쟁’으로 간주한다(김승국 2008, 125-127, 180-184).

맑스와 레닌의 사상은 이후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에 의해 계승·발전된다. 종속이론에 의하면, 세계자본주의 질서는 중심국-주변국 간의 불평등 교환에 기초한 ‘신제국주의’적 수탈체제로, 중심국과 주변국 간의 경제교류는 주변국에 ‘저발전’을 야기하거나(Frank 1966; Dos Santos 1970), ‘종속적 발전’을 초래한다(Evans 1979; Cardoso and Faletto 1979). 그 결과, 중심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주변부 국가들은 권위주의화되며, 이들 주변부 국가들은 다국적 기업 및 국내 자본과의 연합하여 자국의 노동·농민·도시빈민을 억압·배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체제론은 세계경제가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라는 탄탄한 경제적 분업체계의 구축을 통해 중심국이 주변국 및 반주변국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구조화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때 반주변부는 중심국에서의 임금상승 압력을 상쇄시키는 노동력 제공, 그리고 더 이상 이윤창출이 불가능한 중심부의 산업에 새로운 산업기지를 제공함으로써, 중심국과 주변국 사이의 경제적 분업체계에 구조적 안정성을 부여하는 매개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Wallerstein 1984). 요컨대, 이들 이론은 세계경제와 패권국들이 어떻게 개발국의 인민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소외시키고 착취하는가를 보여줌으로써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구조적 폭력의 해소가 평화성취의 핵심 요건임을 강조한다.

넷째, 적극적 평화론(positive peace)이 상정하는 평화는 단순히 ‘폭력 없는 상태’가 아니라 ‘폭력이 극복된 상태’이다. 이는 갈통이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그는 전자를 ‘소극적 평화’로, 후자를 ‘적극적 평화’로 구분한다(Galtung 1964). 즉 소극적 평화가 폭동·테러·전쟁과 같은 직접적인 폭력이 부재하는 평화상태를 뜻한다면, 적극적 평화는 구조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사회경제적 정의, 환경적 온전함, 인권,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 속성·조건·가치관이 확고하게 자리 잡아 모든 종류의 폭력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Amadei 2019, 3).

갈통은, 1964년 ‘적극적 평화’의 개념을 제시한 이래, 기존의 다양한 평화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적극적 평화론’을 체계화시켰다. 그는 물리적 힘만을 고려하는 ‘승자의 평화’는 기존 질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켜주는 강자만을

위한 평화에 불과하고(Galtung 1967, 12), 민주주의 체제의 제도적·규범적 유인 효과를 강조하는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 국가와 비민주주의 국가 간 혹은 비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가능성을 제어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고 보았다(Galtung 1996, 4). 또한 중심국과 주변국 간의 경제적 불평등에 주목하는 ‘계급 없는 평화’는 경제적 수탈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고갈 현상들이 초래하는 간접적 형태의 폭력(예컨대, 질병, 빈곤, 소외 등)에 무관심하다고 지적한다(Galtung 1971, 86).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의 요인만을 강조하는 평화이론은 다양한 종류의 폭력들을 해소하고 극복하기엔 불충분한 대안임을 강조한다(Galtung 1996, 3).

이러한 비판적 인식을 통해, 갈통은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복지·정체성·자유와 같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모독”하고, 인간 기본욕구의 필수조건인 자연의 “생태적 균형”을 훼손하는 것을 폭력으로 규정한다(Galtung 1996, 197). 구체적으로, 그는 폭력을 ① 인간 기본욕구와 자연환경을 의도적으로 침해 혹은 훼손하는 ‘직접적 폭력’ ② 사회 및 세계 질서 내에 구축되어 있는 착취와 억압 및 환경파괴와 같은 간접적 형태의 ‘구조적 폭력’ ③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으로 유형화한다. 그리고 세 차원의 폭력에 준거하여, 그는 ‘적극적 평화’를 직접적 차원에서 상호협력이 존재하고, 구조적 차원에서 (억압 대신에) 자유·(착취 대신에) 평등·(강요 대신에) 대화·(분열 대신에) 결속·(소외 대신에) 참여가 존재하며, 문화적 차원에서 ‘평화의 문화’가 ‘폭력의 문화’를 압도하는 상태로 파악한다(Galtung 1996; Galtung and Fischer 2013, 173-174). 요컨대, 평화란 모든 종류의 폭력이 사라진 ‘정의로운’ 상태를 의미했다(Galtung 1969, 171).

어떻게 ‘적극적 평화’를 성취할 수 있는가? 갈통은 세 차원의 폭력이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한 차원의 폭력은 다른 차원의 폭력을 유발·강화시킨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 ① 타인을 해하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직접적 폭력’을 막기 위한 ‘평화유지’(peace-keeping), ② 사회(국제)질

서의 내부적 모순에서 기인하는 억압과 착취 및 자연파괴 등의 ‘구조적 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평화구축’(peace-building), 그리고 ③ 사람들의 태도와 가정들 속에 존재하는 ‘폭력의 문화’를 ‘평화의 문화’로 전환시키기 위한 ‘평화조성’(peace-making) 등의 다양한 활동들이 요구된다는 것이다(Galtung 1996, 103-112). 이와 더불어, 그는 평화의 성취는 반드시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Galtung 1996, 32, 270).

종합하면, 평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다양하다. 국제관계학자들은 국가관계에 초점을 맞춰 ‘전쟁 없는 상태’를 평화로 상정한다. 즉 ‘승자평화론’은 세력 균형 및 동맹형성을 통해,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해, 그리고 ‘경제평화론’은 시장경제의 확산을 통해 전쟁 없는 국제질서의 확산을 주장한다. 이에 비해, 맑시스트들의 ‘계급 없는 평화론’은 계급적 수탈과 지배가 없는 상태를 평화로 상정하며, 계급철폐를 위한 ‘정의로운’ 폭력을 통한 평화성취를 제안한다. 그리고 ‘적극적 평화론’은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이 사라진 상태를 평화로 상정하고, 평화성취는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요컨대, 이들 평화이론은 이론적 관점과 이에 기초한 현실인식에 따라 평화의 개념, 조건, 그리고 성취방법을 각기 달리 제시한다.

III. 폭력과 평화에 대한 인식과 처방

김대중은 평소 자신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평화의 문’을 여는 것이라고 여겼다(김대중 1989, 43). 이러한 신념은 그가 평소 주창했던 ‘대중경제론’, ‘3단계 평화통일론’ 그리고 ‘지구적 민주주의’ 등 여기저기에 산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대중경제론’과 ‘3단계 통일론’이 각각 우리 사회 및 한반도 차원의 평화를 논의하고 있다면, ‘지구적 민주주의’는 인류적 차원의 평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면, 각각의 차원에서 그가 상정하고 있는 폭력과 평화란 무엇인가? 그

리고 그가 제시하고 있는 평화성취의 전략은 무엇일까?

1. 대중경제론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은 박정희의 개발독재와 성장지상주의의 정치경제적 대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것의 요체는 경제활동 참가자 모두에게 경제성장의 성과가 공정하게 배분되는 ‘정의로운’ 정치경제질서를 만들자는 것이었고, 그것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는 경제민주주의였다(김용철 2019). 이에 대한 그의 생각이 나름의 체계를 갖춘 것은 미국 망명 시절(1982~85)이었으며, 이 시기에 작성된 글이 1986년에 출간된 <대중경제론>이다. 이후 <대중경제론>은 보완을 거쳐 1997년 <대중참여경제론>으로 재출간되었다.

그의 분배에 대한 관심은 1960년대 국회의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박정희의 성장일변도의 경제개발정책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의 문제의식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경제성장인가”였다. 즉 경제성장의 혜택이 소수 특권층과 재벌들에만 집중되고, 정작 경제성장을 위해 애쓴 다수 국민들은 분배에서 배제되는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개발은 진정한 의미의 ‘경제발전’이 아니라, 정권 유지를 위한 ‘개발독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그것이었다(김대중 1986, 114). 1967년 10월 <정경연구>와 1969년 11월 <신동아>의 기고문에서 ‘대중경제론’을 주창하게 된 배경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오늘날 비약적으로 증대된 사회적 생산력을 전제로 할 때, 과연 대중의 생활이 그러한 생산력의 발전에 대응하여 … 향상되고 있는가. … 노동자나 영세민의 생활은 얼마나 나아졌으며 … 농민의 생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 정치권력과 결탁한 특수재벌과 특수층 위주로 세워진 「政治工場」과 「政治工事」에 집중된 일체의 경제정책과 특혜·보호정책은 … 대다수 국민의 생업인 농업과 중소기업을 몰락과 도산으로

몰아넣고, 이 때문에 국민경제는 이질적인 상하구조로 철저히 분해되어 가고 있다(김대중 1969, 177).

경제정책의 목적은 단순히 재화의 증대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증대된 재화가 어떻게 어느 계층으로 분배되고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다(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2019c, 19).

그의 문제의식은 분배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에게 개발독재는 다수 국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그들을 정치경제적으로 소외시키며, 그들의 “자아실현”을 가로막는 일종의 “거대한 폭력”이기도 했다. 아래 글들은 이러한 그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 개발독재 체제는 … 경제개발 없이는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다는 그릇된 가설 하에 … 있기 때문에 … 대중은 오직 … 맹종하고 기만당해야 하는 의무 … 밖에 가질 수 없다(김대중 1970, 26). … 소수의 특권층 이익이 최우선하고 다수대중의 이익이 무시당한 사회, 이것이 바로 오늘의 국민대중이 체험하고 있는 개발독재의 비극이다(김대중 1970, 44).

(개발)독재의 살기는 갈수록 독했다. … 사람들은 실어증에 걸린 듯 말을 잃었고, 지식인들은 자기 검열에 걸린 자신을 발견하고는 치욕에 몸을 떨었다. 당시의 침묵에는 온갖 수모가 들어 있었다. … 거대한 폭력은 국민들을 노려보고 있었다(김대중 2010a, 349).

군사정권 30년을 지내는 동안에 … 농민도 소외되고, 노동자도 소외되고, 지식인도 소외되고, 학생도 서민대중도 소외됐습니다. … 문제

는 자아의 발견, 자아의 확립, 자아의 실현입니다. 이것이 실현되어야 합니다(김대중 1994, 123-124).

당시 그가 제시한 대안은 ‘대중에 의한’ 그리고 ‘대중을 위한’ 경제체제로의 전환, 즉 “대중경제체제”의 실현이었다.²⁾ 그의 표현을 빌리면, ‘대중경제’란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기업가, 노동자, 농민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경제발전의 열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어느 한 개인 혹은 집단, 어느 한 지역 혹은 어느 한 세대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불공평하게 무거운 부담을 지도록 강요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는 경제질서를 뜻했다(김대중 1986, 26). 그에게 대중경제로의 전환은 다수 국민이 개발독재의 ‘거대폭력’으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하였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질서로의 나아감을 뜻했다(김대중 1994, 101).

어떻게 ‘대중경제’를 실현할 것인가? 그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대중경제 실현을 위한 ‘선행’ 조건으로 보았다(김대중 1969, 181; 김대중 1986, 70-71). 즉 ‘거대폭력’을 휘두르는 개발독재 체제를 무너트리는 것이 선결 요건이었다. 하지만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기 때문에 개발독재는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제거돼야 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신념은 1976년 ‘3·1 구국선언문’사건 관련 그의 법정진술에,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 ‘감옥병실’에서 작성한 그의 메모에 잘 드러난다. 그는 국민들에게 ‘비폭력 저항운동’을 통해 권위주의 정권을 물리쳐야 한다고 촉구한다.

나는 비폭력주의자인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게다가 전략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비폭력주의야말로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 개발독재의 대안으로 ‘대중경제체제’가 제시된 것은 1967년으로, 그는 “왜 우리당이 이겨야 하나 - 신민당”이라는 글을 <청맥> 4월호에 발표하였다(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2019b, 570-575).

오늘의 정부는 가장 폭력적인 정권이고, 그 폭력적인 정권에 대해서 폭력을 갖고서 대항하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2019e, 247)

김대중에게 민주주의란 단지 정치민주주의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상정하는 민주주의란 자유와 평등의 원칙이 정치영역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영역에서도 존중되는 “대중참여민주주의”였다(김용철 2019, 222). 그에게 정치민주화는 ‘거대폭력’을 휘두르는 개발독재자의 퇴장을 의미할 뿐, 개발독재가 남긴 권위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사회경제적 관행들의 청산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외형적으로는 (정치)민주주의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경제적·사회적 민주주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다수의 대중들은 여전히 ‘거대폭력’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김대중 1994, 385). 아래 인용된 글들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발표된 것으로, 사회·경제적 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한 그의 인식을 잘 보여 준다.

지금 우리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도덕의 타락, 폭력행위의 난무, 인명의 경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풍조 등은 5·16 이래 30년 동안 판쳐온 군사문화의 유산인 것입니다(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2019g, 470).³⁾

재벌의 출현은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의 강력한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 하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 재벌기업의 막대한 자금력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그 산업에서 밀려나거나, 잘해야 작은 몫을 차지하고 겨우 생존해 나갈 수밖에 없다(김대중 1997, 221-222).

3) 1989년 1월 28일, 연두기자회견문.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들은 ... 노동자들을 통제·관리하고 노동운동을 억압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노사의 자율적 교섭관행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화를 표방하는 6공화국 정부의 노동정책 역시 구태의연한 노동자의 통제와 노동운동에 대한 억압 기조를 유지하고 ... 있다(김대중 1997, 253-254).

개발독재의 폭력적 유산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 그리고 “정의로운” 정치경제질서를 구축하는 것이 긴급하며(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2019h, 778), 이를 위해 사회·경제적 민주화와 공동체적 윤리문화의 함양이 절실하다고 보았다(김대중 1997, 297).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관치금융”과 “정경유착”의 근절을 통한 공정한 금융질서의 확립(김대중 1997, 155), “상속세와 증여세”의 엄격한 적용을 통한 “재벌 세습화”의 차단,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강화를 통한 경제력 집중의 완화(김대중 1997, 223-224),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촉진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화(김대중 1997, 256),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을 통한 “분배의 정의”의 실현(김대중 1997, 297) 등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노동자와 사용자가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공동체적 윤리의식의 함양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김대중 1997, 252), 왜냐하면, 노동자와 기업이 공동운명체적 관계에 있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될 때 비로소 노조는 ‘조합이기주의’에서 그리고 기업은 ‘권위주의적 경영’에서 탈피하여, 노조와 기업은 사회적 책임의식을 지닌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대중경제론’의 요체는 다수 국민들의 자유와 평등을 훼손하는 개발독재의 거대폭력과 그것이 남긴 폭력적 유산들의 극복 혹은 제거를 통해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정의로운’ 정치경제질서와 공동체적 사회문화를 만들어 가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그가 개발독재를 직접적 폭력을 넘어 일종의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폭력으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거

대폭력의 극복 방안으로, 그는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한 정치의 민주화, 사회경제적 민주화, 그리고 공동체적 사회윤리의 함양을 강조했다.

2. 한반도 3단계 통일론

평소 김대중은 우리 민족이 “한없는 재앙과 불안”을 감내해야 하는 남북분단 현실에 대해 슬퍼했다(김대중 1970, 서문). 그는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 상황을 우리 민족에 대한 “참기 어려운 모욕”이자(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2019c, 22),⁴⁾ “민족의 변영”을 지연시키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커다란 “족쇄”로 인식했다(김대중 1994, 196-197). 즉 그에게 분단 상황은 민족의 잠재능력을 위축시켜 한반도의 자주적 발전을 어렵게 만들고, 체제 대결과 적대감을 심화시켜 ‘민족공멸’의 전쟁을 부추기는 일종의 구조적 폭력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민족의 통일 없이는 절대로 진정한 민족의 평화와 변영은 있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이어졌다(김대중 2010a, 278). 하지만 무력통일 혹은 흡수통일은 대안이 될 수 없었다. 그것은 또 다른 동족상잔의 비극을 불러올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1968년 5월 <신세계> 기고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우리 통일은 중대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통일을 하자는 것이지 통일 자체가 목적은 아닌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자유롭고 평화롭게 ... 통일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려운 일이며 고통스러운 것이다(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2019c, 254.).

요컨대, 그에게 통일은 민족의 평화와 공동변영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었다. 그렇기에 그는 어떻게 한반도 통일을 평화롭게 달성할 것

4) <정경연구> 1967년 10월호에 게재된 기고문.

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사색해야 했다. 그의 거듭된 숙고는 훗날 ‘햇볕정책’으로 불리는 ‘대북포용정책’의 철학적 기초가 된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이었던 1960년대부터 “민족의 평화와 번영”의 대안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고민했다(김대중 2010a, 278). 이에 대한 그의 단상이 처음 발표된 것은 1971년이였다. 그해 2월, 그는 미국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무력 포기”에 따른 남북 긴장완화, 비군사적 기자·서신·체육 등의 교류, 정치 및 경제적 교류” 등으로 구성된 3단계의 통일안을 제안했다(김대중 2010a, 278). 뒤이어, 같은 해 4월에 치러진 대통령선거에서 “남북교류와 공산권 외교추진, 그리고 미·일·소·중 4대국에 의한 한반도 평화보장책”을 선거공약으로 발표했다(김대중 1994, 300).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을 정리하여, 1972년 2월 일본 외신기자클럽에서 “평화적 공존, 평화적 교류의 확대, 평화적 통일”로 구성된 ‘3단계 통일안’을 발표했다(김대중 1994, 303).

그즈음 남북관계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것은 1972년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된 ‘7·4 남북공동성명’으로, 그 내용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이 “상호 비방하지” 않고, “무력충돌을 하지 않으며,”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를” 실시하고, “서울-평양 간 상설 직통전화”를 설치한다는 것이었다(동아일보 1972/07/04, 1). 당시 김대중은 ‘7·4 남북공동성명’이 “아시아의 평화와 긴장완화에 상당한 공헌을 할” 사건으로 높게 평가했다(김대중 1994, 299). 하지만 이후 유신체제로의 전환과 남북대화의 단절을 지켜보면서, 그는 민주주의 없는 남북대화 시도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7·4 남북공동성명은 몇 차례 서로 만나 의중을 탐색하는 시늉만 내다가 결국 남북한 양 진영의 권력 기반만을 강화시키고 슬며시 소멸”시켰다는 것이다(김대중 2010a, 277). 이를 계기로 그는 민족분단이 독재자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지 않도록 국민이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민주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다. 1983년 5월 미국 버클리대학 세미나에서 발표한 그의 글(“한반도의 평화와 민족통일”)은 왜 그가 ‘선민주·후통일’의 입장을 견지하게 되었는지 알려준다.

동아시아의 평화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필요로 하며, 이것은 다시 평화공존과 대화를 위한 성실한 태도를 필요로 한다. … 남한에 민주주의가 회복되(지) … 않으면 대화는 불가능하다. … 내 생각에, 전두환은 통일에 관하여 전임자(박정희)와 매우 비슷한 약삭빠른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다. … 전두환 정권이 민주화되어 국내의 통합과 연대를 이룩해야만 비로소 북한을 설득하여 통일을 위해 협력하도록 만들 수 있다(김대중 1994, 313-314).

12대 총선을 며칠 앞둔 시점인 1985년 2월 8일, 망명생활 중인 김대중은 주변의 만류를 뿌리치고 귀국한다. 그의 목적은 민주주의의 회복이었다. 이는 그의 ‘선민주·후통일’의 신념과도 무관치 않았다. 이즈음 그는 기존 ‘3단계 통일안’에 제도적 개념을 가미한 새로운 버전의 “공화국 연방제 통일방안”을 작성한다. 그 내용은 ‘평화공존·평화교류·평화통일’의 3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도적 차원에서 애초의 통일안을 보다 구체화시켜 ‘1연합 2독립정부→1연방 2지역 자치정부→1국가 1정부’의 3단계로 재구성한 통일방안이었다(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2019h, 798-800).

그의 속고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통일안이 보다 실천적이고 전략적인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단계별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특히 통일안의 첫 번째 단계가 통일의 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에, 이에 대한 실천적 프로그램들이 필요했다. 1995년 마침내 그는 “남북연합→남북연방→완전통일국가”로 새롭게 구성된 ‘3단계 통일안’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이 독립국가로서 주권과 권한을 보유한 채 교류·협력을 통해 하나의 사회·문화·경제공동체를 이룩하며, 남북연방 단계에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체제 기반의 “1국가·1체제·2지역정부”를 수립하여 남북이 민족적 일체감을 회복하고 균비축소를 이루며, 완전통일국가 단계에서는 남북 합의를 바탕으로 연방헌법과 연방의회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아태평화재단 1995, 34-44).

햇볕정책은 그가 1970년대 초 이래 끊임없이 다듬어온 평화통일안의 결과물이었다. 김대중은 일방에 의한 흡수통일을 일종의 ‘통일지상주의’로 보았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흡수통일안은 남북 간의 “적대감”과 “무력대결의 가능성”을 제거시켜 결국 “민족공멸”을 초래할 위험성을 지닌 통일방안이라는 것이다(김대중 1994, 207). 따라서 그는 남과 북 모두가 “상대방을 병합하거나 흡수하려는 꿈을” 버리고(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2019i, 41),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착에 토대를 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한다고 보았다(대통령비서실 1999, 65). 이를 위해, 그는 교류·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남북 간의 적대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히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 일환으로, 그는 우선 손쉬운 것부터 먼저 교류하고 어려운 것은 서서히 하자라는 “선이후난(先易後難),” 그리고 먼저 베풀고 필요한 것은 후에 취하자라는 “선공후득(先供後得)”에 기초한 남북의 교류·협력을 제안하였다(문정인 2015, 35-36; 임동원 2015, 278-280).

그렇다고, 그는 평화를 위해 국가안보를 위협에 빠트리는 “비현실적·환상적 이상주의자”가 결코 아니었다. 그는 남북의 정치·군사적 대결구조가 단기간의 노력으로 해소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햇볕정책은 장기간의 실천과 인내를 요구하는 것이었기에, 그는 북한의 도발 억지를 위한 강한 안보가 중요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이 점에서 그는 미국과의 동맹과 군사력의 강화를 강조하는 ‘현실주의자’였다(문정인 2015, 43). 그는 ‘튼실한 군사안보’에 기반을 둔 ‘화해·협력·교류’를 강조했다. 이러한 신념은 1972년 7월 외신기자클럽 회견문에서도, 그리고 1998년 2월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한결같았다.

나는 … 침략에 대한 응징능력을 갖추지 못한 평화공존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2019d, 674).

저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대해 당면한 3원칙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어떠한 무력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우리는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셋째,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을 가능한 분야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대통령비서실 1999, 65).

또한 그는 ‘자유주의자’이기도 했다. 그는 남북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상호간 경제의존도가 높아지고, 상호의존도의 심화는 북한을 개방경제와 시장경제로 변화시켜 한반도에 ‘실질적인’ 평화상태를 가져다 줄 것으로 확신했다. 나아가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변화로 이어질 것이며, 이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남북의 평화통일이 성취될 것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남한과 북한 간의 경험은 남북 간 화해에 도움이 되고, 양측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장사를 같이 하면 싸우지 않습니다. 남북이 서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돈벌이를 하고 이해관계를 갖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해와 협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대통령비서실 1999, 215).

북한이 우리와 거래하고 장사를 하면 서서히 개방으로 나가고, 개방이 되면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경쟁력을 키우려면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장경제는 민주주의를 안 하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 북한도 개방과 시장경제, 다원화와 더불어 민주화 쪽으로 갈 겁니다(김대중 1994, 418).

이렇듯 그의 한반도 평화론에는 다양한 가치들이 내재되어 있다. 그는 한반도

의 전쟁억지를 보장하기 위해 강한 안보가 필수적이라고 믿는 ‘현실주의’의 옹호자였다. 또한 교류 및 협력을 통해 남북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제고시키고자 했던 ‘경제평화론’의 지지자였으며,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를 통해 북한의 체제변화를 유인·촉발하여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일궈내고자 했던 ‘민주평화론’의 신봉자였다.

3. 지구적 민주주의

‘대중경제론’이 국내 차원의 평화에, 그리고 ‘3단계 통일론’이 한반도 차원의 평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지구적 민주주의론’은 ‘인류의 번영과 행복’ 그리고 ‘인간과 자연과의 공생’과 같은 세계적 차원의 평화에 초점을 맞춘다(김대중 1994, 406-407). 이 같은 인식의 확장은 1992년경에 이른바 ‘신인도주의’라는 이름으로 피력된 바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 모든 나라들이 자국민의 자유와 복지뿐만 아니라, 타국민의 자유와 번영 그리고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생존과 번영도 함께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김대중 1994, 407). 이후 그의 ‘신인도주의’는 1993년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방문 시절 앤서니 기든스 및 존 던 교수 등과의 대화를 통해 더욱 숙성되어 ‘지구적 민주주의’로 명명된다(김대중 2010a, 615). 그는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한 현 시대의 과제로 종교·문명·인종·빈부 등의 차이에서 오는 차별과 갈등의 해소, 그리고 자연생태계의 복원을 꼽는다.

20세기가 남겨놓은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우리의 양대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우리의 양대 목표란, 하나는 전 인류가 차별 없이 평화와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 지구를 다시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으로 되돌리고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김대중

1994, 408-409).

주목할 대목은 그가 지구환경의 황폐화를 “보통 사람들의 존엄성 있는 삶”을 해치는 구조적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김대중평화센터 2007, 95). 경쟁적인 경제개발로 인한 무차별적인 환경파괴가 인류의 “평화롭고 건강한 생활”은 물론이고, 급기야 “인류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폭력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김대중평화센터 2007, 79, 95). 이런 맥락에서 그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연의 존재들, 동물과 흙과 물과 공기 등의 생존과 번영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김대중 1994, 53). 그렇다고 그는 자연생태계의 보호를 위해 모든 개발의 전면적 중단을 주장하는 반(反)개발주의자는 아니었다. 개발의 중단은 인류의 경제적 곤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개발의 불가피성을 수용한다(김대중 1994, 106). 그의 대안은 “자연의 생명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하며(김대중 1994, 53), 이를 위해 “자연과 사람을 하나로 생각하는 자연존중과 애호의 사상”의 함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김대중 1994, 106). 이러한 그의 인식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이미 1986년 출간된 <대중경제론>에서 ‘개발독재’가 환경문제를 등한시한 결과, “국민들이 그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다고 지적하면서, 자연생태계의 보존이 시민들의 “중요한 과업”임을 강조한 바 있었다(김대중 1986, 180-181).

또 다른 흥미로운 대목은 그가 각종 차별로 인한 갈등, 빈부격차의 심화, 그리고 지구환경의 훼손이 각기 독립적으로 발생된 현상이기보다는 상호 유기적 연관을 지니면서 진행된 현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의하면, 종교·종족·문명 간의 갈등의 저변에는 빈부격차가 존재하고, 빈부격차의 심화는 다시 지구환경의 파괴를 촉진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21세기를 평화의 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 개도국과 선진국의 (빈부)격

차는 ... 개도국들의 자기생존을 위한 난개발을 초래함으로써 전 지구적인 환경파괴도 촉진시키게 됩니다. ... 빈부격차의 해결 없이는 21세기의 세계평화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빈부격차의 문제야말로 종교, 문화, 인종, 이념 갈등의 저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김대중 2001).

그는 국가 간 빈부격차 해소를 인류의 평화를 위해 가장 긴요한 대목으로 본다. 어떻게 국가 간 빈부격차를 해소할 것인가? 그는 일찍부터 부의 편중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질서 자체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됨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아래 인용문은 그가 1953년 9월 <민주여론>에 기고한 글의 일부이다.

... 자유 각국을 지배하고 있는 자본주의적 경제제도가 제국주의적 착취와 부정을 옹호하는 결과가 앞된다고 어찌 보장하겠는가? 자본주의적 불평등 ... 이것이 모다 우리 인류 특히 약소민족을 괴롭히는 것 일진대 우리의 진실한 해방과 행복에의 길이란 과연 무엇인가?(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2019a, 15).

이와 관련하여, 그는 맑시스트들의 ‘계급 없는 평화론’ 및 종속이론이 상정 혹은 함의하는 계급 기반의 ‘폭력혁명’ 혹은 경제적 고립은 결코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며, 또한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개도국과 선진국 간) 불평등관계를 ... 완전히는 제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 (그렇다고) 저개발국가가 선진국가들로부터 격리되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은 너무나 단순한 논리(이다) ... 종속관계의 반대가 고립과 배타적 태도의 지향이 될 수는 없다(김대중 1986, 76-77).

빈부 문제를 비롯한 각종 갈등과 환경문제의 해소를 위해, 그는 무엇보다도 국가 및 집단 간의 전면적 소통과 대화를 통한 “정신적인 상호이해”가 긴요하다고 역설한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대화가 있는 곳에 이해가 있고, 이해가 있는 곳에 협력이” 있으며, “협력이 있어야만 평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대중평화센터 2007, 78). 즉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와 상호협력의 규범과 문화가 모든 국가로 확산될 때, 교역국들 사이에 “공정한 이윤보장”에 바탕한 “상호이익주의”의 규범이 정착될 수 있고(김대중 1986, 77), 종교·문화·인종 등의 차이로 인한 “독선적이고 폭력적인” 차별이 극복될 수 있으며(김대중 1994, 392),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지구생태계의 보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김대중 1994, 161-162).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지금껏 국민국가 내부에 머물러왔던 민주주의를 “보편적·세계적인 시야”를 지닌 지구적 차원의 민주주의로 확장시킬 것을 제의한다(김대중 1994, 405-406).

지금까지는 국민국가 안에서 민주주의를 해왔는데, 그렇게 되니까 자연히 자기 국민국가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고, 남의 나라에 대해서 배타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 제3세계에 대한 수탈이 자행됩니다. ... 국민국가 안에서의 자유와 정의의 실현뿐만이 아니라, 지역 연방 안에서의 자유와 정의도 실현되고, 세계적으로도 실현되어야 합니다(김대중 1994, 102-103). ... (또한) 민주주의가 인간만이 아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지구적 차원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 이 지구적 민주주의를 통해서 인간은 우리 인류뿐만 아니라 어머니인 지구, 벗인 모든 지구상의 자연 존재들과 화해하고 같이 살고 번영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승화·발전시켜야 합니다(김대중 1994, 161-162).

요컨대, ‘지구적 민주주의’의 요체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 국민국가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 민주주의를 전 인류적 차원의 민주주의로 확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세계 각국이 이른바 ‘신인도주의’에 기초하여 새로운 차원의 민주주의를 구현해 갈 때 비로소 국가·인종·문화 간의 대화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차별과 대립을 완화할 수 있으며, 인류사회의 자유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고 인간과 자연 간의 평화로운 공존·번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IV. 평화관의 특징과 철학적 기반

평화의 개념 그리고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의 세계는 매우 다양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각각의 평화이론이 주목하는 ‘폭력의 형태’ 혹은 상징하는 ‘폭력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김대중은 무엇을 ‘폭력’으로 보았을까? 그가 주장했던 대중경제론, 한반도 평화론, 지구적 민주주의를 종합적으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대중경제론’에서 그는 개발독재 및 개발독재의 권위주의적 유산을 ‘자유와 평등’ 및 ‘정의와 공정’을 훼손시켜, 다수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의 여건”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일종의 폭력으로 여겼다(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2019h, 561). 또한 ‘한반도 평화통일론’에서 그는 남북분단 상황을 우리 민족의 잠재적 발전능력의 발현을 억제하고, 나아가 남북 간의 적대감을 심화시켜 ‘민족공멸’을 촉발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폭력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지구적 민주주의’에선 각종 차이로 인한 차별과 갈등 그리고 자연환경의 훼손을 인류의 행복과 생존을 위협하는 또 다른 폭력으로 간주했다. 이렇게 볼 때, 비록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인간 신체뿐만 아니라 인간 내면세계에 대한 위해, 집단적 차원의 차별과 갈등,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수탈과 배제, 그리고 자연의 파괴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자유와 행복 그리고 번영을 위협·훼손하는 모든 것을 폭력으로 간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그는 평화를 “인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겼고(김대중평화센터

2007, 78), ‘평화의 문’을 여는 것이 자신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이다(김대중 1989, 43). 그것은 자유·평등·정의의 실천을 통해 “고난받고 소외 받는 사람들을 위해 인간다운 삶의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었고, 남북분단 상황을 극복하여 민족구성원 모두에게 “기쁨과 평화의 대로를 열어”주는 것이었으며, 우리 민족이 “세계의 평화와 소외된 민족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도덕적 선진국이 되는 기틀”을 세우는 것이었다(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2019h, 561). 요컨대, 그의 평화가 담고 있는 의미의 세계는 자유와 평등, 공정과 정의, 조화와 공존 등 다양한 가치들을 포괄한 것이었다.

어떻게 평화를 성취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그의 글 어느 곳에서도 한결 같다. 그는 폭력을 “절대로 배격해야” 할 “악”으로 간주한다(김대중 2007, 9). 아래 인용된 글들은 평화는 비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통해 성취되어야 한다는 그의 신념을 잘 보여준다.

나는 ‘조속한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신념과 목표에는 확고부동하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방법은 평화적이어야 ... 한다고 믿는다(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2019f, 17).⁵⁾

국내외의 다양한 ... 모순의 제거는 반드시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 우리는 정의의 추구도 비폭력으로, 악에 대한 투쟁도 비폭력으로 해야 합니다(김대중 2007, 9).

요컨대, 그에게 평화란 목적이자 수단이였다. 평화는 그 자체로 인류가 추구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이며, 평화성취의 수단 역시 ‘평화적’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오기 때문에, “어떠한 좋은 목적”을 지닌 것이라도 ‘폭력’의 사용은 절대적으로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5) 1979년 12월 8일 성명서 “긴급조치 9호 해제에 즈음하여.”

신념이었다(김대중 1989, 121-122).

그의 평화성취의 방안은 무엇일까? 대중경제론에서 개발독재라는 거대폭력을 극복하기 위해, 그는 정치·사회·경제 모든 방면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할 것과 공동체적 윤리문화의 함양을 촉구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남북교류와 협력을 심화시켜 북한을 개방경제와 시장경제체제로 유인해내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북한의 체제변화를 이끌어 낼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세계적 차원의 평화를 실현하려면, 국내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민주주의를 전 인류적 차원의 ‘지구적 민주주의’로 확대시킬 것을 역설한다. 결국 그가 제안하는 평화성취를 위한 비폭력적인 수단과 방법이란 ‘민주주의’라는 제도적 절차와 규범으로 귀결된다.

이는 김대중의 평화관이 기본적으로 ‘자유평화론’의 철학적 기초에 바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된다(Sørensen 1994, 198-191). 그 하나는 민주주의 체제에 내재된 윤리적 차원으로, 모든 인간의 가치가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도덕적 신념이다. 이러한 신념을 공유하는 국가는 상호이해와 존중의 규범 그리고 평화적 갈등해소의 문화를 지니게 되며, 대내외적으로 평화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경제적 합리성의 차원으로, 필요한 자원 및 상품의 조달에 있어 시장을 통한 거래가 전쟁을 통한 획득보다 훨씬 비용 효과적이라는 것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가는 국가 간 공통이해와 상호신뢰를 제고시켜 전쟁억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김대중의 평화관이 전적으로 자유평화론의 철학적 기초에만 기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논의의 수준에 따라 유연하게 다양한 평화방안들을 제안한다. 대중경제론은 정치민주화 및 사회·경제민주화와 함께, 공동체주의적인 시민적 덕성을 강조한다. 또한 지구적 민주주의는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제안하는 세계시민주의와 동양의 전통적인 자연관인 ‘인간과 자연의 합일사상’을 결합시킨다. 이러한 유연한 사고는 한반도 평화론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군사력 강화를 통한 전쟁억지와 평화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현실주의’

그리고 평화구축 및 평화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자유주의’ 간의 실용주의적 균형과 조합을 통해 남북의 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을 추구한다.

누가 평화성취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 그는 정치지도자·지식인·기업인·언론인 등 지도적 위치에 있는 선각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 일반시민들이 평화성취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인간은 “본성적으로 선과 악의 양면을” 모두 지닌 존재이기에, 시민들은 자기계발과 학습을 통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능력과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비판정신”을 함양해야 한다고 보았다(김대중 1994, 110-112). 즉 평화성취의 주체는 일반시민들이며, 이들의 깨어있는 ‘양심’과 실천적 ‘행동’을 통해 ‘평화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얘기한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 진정 평화롭고 정의롭게 사는 나라가 되려면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야 합니다. 방관하는 것도 악의 편입니다. ... 우리나라가 자유로운 민주주의, 정의로운 경제, 남북 간 화해 협력을 이룩하는 모든 조건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양심의 소리에 순종해서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김대중 2010b, 594).

...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있는 전쟁의 문화를 씻어 냅시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화와 협력의 문화를 심읍시다(김대중 2001).

요약하면, 김대중에게 평화란 단순히 ‘폭력 부재의 상태’가 아니라, 인간존엄성이 존중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행복한 상태를 의미했다. 또한 평화는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성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인류적 차원에서 재개념화된 민주주의의 확산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경제의 구현이 중요하다고 보

있다. 그의 평화관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자유주의적 사고였다. 그 바탕 위에 때론 모순적으로 보이는 다양한 철학적 기초 - 민주주의와 공동체주의, 자유주의와 현실주의, 민족주의와 세계시민주의 - 들을 균형과 조화의 관점에서 포괄하였다. 나아가 그는 평화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스스로 평화문화를 내면화하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서 시작된다고 역설하였다.

이렇게 볼 때, 김대중의 평화관은 ‘폭력’과 ‘평화’에 대한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적극적 평화론’과 매우 닮아있다. 하지만 ‘적극적 평화론’이 제시하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의 처방책(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모든 평화적인 수단과 방법)에 비해, 그의 평화관은 보다 구체적인 평화전략(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 공동체주의적 덕성의 함양, 자연에 대한 존중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또한 평화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낙관적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평화론’과 궤를 같이하나, ‘승자평화론’이 주장하는 평화의 조건인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와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 간에도 평화가능성이 열려있음을 전망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평화론’과 다른 면모를 보인다. 그리고 그는 ‘계급 없는 평화론’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나, 자본주의 질서에서 발산되는 구조적 폭력은 ‘폭력혁명’이 아닌 사회경제적 민주화 및 교역국가 간 “상호이익주의”의 규범 형성을 통해 해소할 것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맑시스트들의 평화론과도 차별성을 보인다.

V. 결론: 성과와 한계 그리고 함의

기존연구들이 햇볕정책이나 외교정책에 초점을 맞춰 김대중의 평화사상을 분석했다면, 이 글은 ‘한반도 평화론’뿐만 아니라 ‘대중경제론’과 ‘지구적 민주주의’로 분석의 대상을 넓혀 그의 평화에 대한 인식과 철학을 재조명했다. 분석결

과는 그의 평화철학이 남북관계 혹은 국가안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일국 차원의 사회공동체와 지구적 차원의 인류공동체 등 다양한 수준을 포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가 상정하는 평화는 전쟁억지 및 교류·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및 신체적 위해, 구조적 수탈 및 억압, 문화·종교·인종적 편견 및 차별, 그리고 자연의 훼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폭력들을 비폭력적으로 제어하는 과정이자 제어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특히 폭력의 제어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결합된 민주적 시장경제의 확산, 공동체주의적 덕성의 함양, 그리고 인류적 차원에서 재개념화된 민주주의의 확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요컨대, 그에게 평화는 선협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준비하고 만들어가야 할 대상이었다.

정치지도자의 철학이 반드시 온전하게 구현되는 것은 아니다. 지도자의 비전은 현실세계의 우연성과 구조적 제약으로 축소되거나 좌절되기 마련이다. 김대중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는 IMF의 신자유주의적 처방(금융구조조정, 기업지배구조개혁, 노동시장유연화 등)을 조건 없이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따라서 대중경제론에서 강조되었던 공정분배와 경제민주화는 처음부터 정부정책의 우선순위가 될 수 없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의 일환으로 재벌개혁이 시도되었지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재벌기업의 위상과 기업경쟁력의 제고라는 상황적 요구에 직면하여 재벌개혁은 결국 보류되고 말았다. 이에 비해, 많은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유연화로 실직하거나 비정규직으로 탈락하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이후 경제위기 국면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김대중 정부는 사회복지체제의 정비 및 강화를 통해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부작용을 해소하려 했지만, 사회양극화와 경제불평등을 완화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일부 지지자들로부터 ‘신자유주의에 투항한 지도자’ 내지 ‘변절자’라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

그의 대북포용정책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통해 남북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나, 우리 사회는 내부적으

로 ‘남남갈등’의 이념적 대립을 경험해야 했다. 비록 햇볕정책은 미국 클린턴 정부의 이해와 협조로 별 탈 없이 진행되었지만, 이후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핵문제가 제기되고 대북 강경노선으로 선회되자, 남북관계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햇볕정책은 북의 핵개발을 방조하고 ‘남남갈등’을 부추긴 이상주의적이고 감성적인 통일방안이라는 국내 보수세력들의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평화철학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무엇보다도 ‘조국근대화’를 내세운 박정희의 발전국가체제가 실은 정권안보를 위해 다수의 국민을 희생·소외시킨 ‘거대폭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설파하고 대항담론을 형성시켜 궁극적으로 정치민주화를 성취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그가 강조했던 공정분배 및 경제민주화의 가치는 우리 사회가 단순히 정치민주화에 머물지 않고 경제민주화 및 사회복지와 같은 실질적 차원의 민주주의로 나아갈 것을 끊임없이 추동하는 동력원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평화철학은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의 인식 틀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햇볕정책은 한국전쟁 이후 유일한 대안이었던 군사적 대치와 흡수통일을 뛰어넘어 남북의 화해와 평화공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더불어, 햇볕정책은 그간 정치적 지배이념이었던 ‘반공주의’의 위상을 약화시켜 우리 사회의 이념적 지평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했다.

우리가 마주하는 작금의 현실은 그가 상정했던 평화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우리 사회는 부의 불평등의 심화로 전에 없는 계급갈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북·미 간의 상호불신으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정체상태에 빠져있다. 또한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국가 간 산업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환경오염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인류는 기후변화라는 대재앙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모든 비관적 현상을 구조적 요인의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구조적 제약을 극복하고 돌파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의지이고 행동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김대중의 평화철학이 주는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인간존엄성과 자연존중이라는 보편적 원칙에 기대어 우리

모두가 폭력에 대항하는 주체가 되어 “평화를 준비하고 실천해 가자”는 그의 메시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지고 보면, 폭력을 만들어내는 행위자도, 폭력으로부터 위협받는 대상도, 폭력을 해소해야 할 주체도 우리이기 때문이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다음 해에 발간된 자서전 서문의 제목은 “생의 끄트머리에서”였다. 그는 서문 마지막 문장을 “백성들이 주인인 세상에서 모두 평화롭게 살기를 바란다”고 적었다(김대중 2010a, 23).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했다: “평화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대중. 1969. “대중경제를 주창한다.” 『신동아』 11월호, 176-183.
- 김대중. 1970. 『내가 걷는 70년대』. 서울: 범우사.
- 김대중. 1986. 『대중경제론』. 서울: 청사.
- 김대중. 1989. 『평화를 위하여』. 서울: 학민사.
- 김대중. 1994. 『나의 길 나의 사상』. 서울: 한길사.
- 김대중. 1997. 『대중참여경제론』. 서울: 산하.
- 김대중. 2001. “노벨평화상 제정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 연설문.” http://kdjpeace.com/home/bbs/board.php?bo_table=b02_03 (검색일: 2021.01.20).
- 김대중. 2007. “추천사.” 글렌 D. 페이지. 『비살생 정치학』. 서울: 백산서당, 9-10.
- 김대중. 2010a. 『김대중 자서전 1』. 서울: 삼인.
- 김대중. 2010b. 『김대중 자서전 2』. 서울: 삼인.
- 김대중평화센터. 2007. 『통일 지향의 평화를 위하여』. 서울: 한겨레출판.
- 김승국. 2008. 『마르크스의 전쟁·평화론』. 파주시: 한국학술정보.
- 김용철. 2019. “경제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김대중의 인식과 철학.” 『아세아연구』 62권 3호, 209-243.
- 김학재. 2017. “김대중의 통일·평화사상.” 『통일과 평화』 9집 2호, 59-90.
- 노명환. 2018. “성리학적 구성주의 관점과 복잡계 이론으로 본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의 평화사상 및 정책과 제4차 산업혁명의 원리.” 『역사문화연구』 67집, 121-196.
- 대통령비서실. 1999. 『김대중대통령연설문집 제1권』. 문화관광부 정부간행물제작소.
- 동아일보. 1972. “남북통일 자주·평화 원칙 합의.” (7월 4일), 1.
- 문정인. 2015. “김대중 대통령의 외교철학.” 양성철·이상근 엮음. 『김대중 외교: 비전과 유산』. 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3-46.
- 서정민. 2015. “김대중과 한중관계.” 이춘복 편. 『김대중과 주은래: 평화외교사상의 재조명』. 연세대학교 대학문화출판문화원, 132-145.
- 아태평화재단. 1995.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서울: 아태평화출판사.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2019a. 『김대중 전집 II, 1권』. 연세대 출판문화원.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2019b. 『김대중 전집 II, 4권』. 연세대 출판문화원.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2019c. 『김대중 전집 II, 5권』. 연세대 출판문화원.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2019d. 『김대중 전집 II, 6권』. 연세대 출판문화원.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2019e. 『김대중 전집 II, 8권』. 연세대 출판문화원.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2019f. 『김대중 전집 II, 9권』. 연세대 출판문화원.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2019g. 『김대중 전집 II, 13권』. 연세대 출판문화원.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2019h. 『김대중 전집 II, 14권』. 연세대 출판문화원.
-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편. 2019i. 『김대중 전집 II, 15권』. 연세대 출판문화원.
- 임동원. 2015. 『피스 메이커』. 파주시: 창비.
- 정경환. 2011. “김대중 정권 대북정책의 비판적 고찰.” 『통일전략』 11권 2호, 39-71.
- 황보윤식. 2012.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서울: 동연.
- Adolf, Antony. 2009. *Peace: A World History*. Cambridge, UK: Polity Press.
- Amadei, Bernard. 2019. “Engineering for Peace and Diplomacy.” *Sustainability* 11, 1-17.
- Boulding, Kenneth E. 1978. *Stable Peace*. Austin, TX: University of Texas Press.
- Cardoso, Fernando C. and Enzo Faletto. 1979.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os Santos, Theotonio. 1970. “The Structure of Dependenc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0:2, 231-236.
- Doyle, Michael W. 1997. *Ways of War and Peace: Realism, Liberalism, and Socialism*. New York, NY: W. W. Nortons & Co.
- Evans, Peter. 1979. *Dependent Development: The Alliance of Multinational, State, and Local Capital in Brazil*.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Frank, André G. 1966. “The 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 *Monthly Review* 8:4, 17-31.
- Galtung, Johan. 1964. “An Editorial.” *Journal of Peace Research* 1:1, 1-4.
- Galtung, Johan. 1967. *Theories of Peace: A Synthetic Approach to Peace Thinking*.

- Oslo: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 Galtung, Johan. 1969.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Journal of Peace Research* 6:3, 167-191.
- Galtung, Johan. 1971. "A Structural Theory of Imperialism." *Journal of Peace Research* 8:2, 81-117.
- Galtung, Johan. 1996. *Peace by Peaceful Means: Peace and Conflict, Development and Civilization*. London: SAGE Publications.
- Galtung, Johan and Dietrich Fischer. 2013. *Johan Galtung: Pioneer of Peace Research*. New York: Springer.
- Gartzke, Erik. 2007. "The Capitalist Pea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1:1, 166-191.
- Gilpin, Robert. 1981.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eld, David. 안외순 옮김. 1996. 『정치이론과 현대국가』. 서울: 학문과 사상사.
- Jarstad, Anna et al. 2010. *Three Approaches to Peace*. Umeå Working Papers in Peace and Conflict Studies, no 12.
- Jervis, Robert. 1978.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30:2, 167-214.
- Johansson, Patrik and Abrak Saati. 2020. *Different Methods for Analyzing Varieties of Peace*. Umeå Working Papers in Peace and Conflict Studies, no 13.
- Kant, Immanuel. 박환덕·박열 옮김. 2015. 『영구평화론』. 파주시: 범우사.
- Kindleberger, Charles P. 1986. *The World in Depression, 1929 ~1939*.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Maoz, Zeev. 1989. "Joining the Club of Nations: Political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Conflict, 1816-1976."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3:2, 199-231.
- Maoz, Zeev and Bruce Russett. 1992. "Alliance, Contiguity, Wealth, and Political Stability: Is the Lack of Conflict among Democracies a Statistical Artifact?"

International Interactions 17:3, 245-267.

Morgenthau, Hans J. 1973.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New York: Alfred A. Knopf.

Owen, John M. 1994. "How Liberalism Produces Democratic Peace." *International Security* 19:2, 87-125.

Richmond, Oliver P. 2006. "Patterns of Peace." *Global Society* 20:4, 367-394.

Richmond, Oliver P. 2008. *Peace in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NY: Routledge.

Sørensen, Georg. 김만흠 옮김. 1994. 『민주화와 민주주의』. 서울: 풀빛.

Wallerstein, Immanuel. 1984. *The Politics of the World-Economy: The States, the Movements and the Civilization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Waltz, Kenneth N. 1979.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

Weede, Erich. 1996. *Economic Development, Social Order, and World Politics*. Boulder, CO: Lynne Rienner Publishers.

Wendt, Alexander. 박건영 외 옮김. 2009. 『국제정치의 사회적 이론: 구성주의』. 서울: 사회평론.

투고일: 2021.06.14.	심사일: 2021.07.23.	게재확정일: 2021.08.02.
------------------	------------------	--------------------

Kim Dae-Jung's View of Peace from the Perspective of Modern Peace Theory

Kim, Yongcheol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article analyzes Kim Dae-Jung's view of peace and violence and its philosophical basis. If most of the prior studies analyzed his view of peace by focusing on the Sunshine Policy or foreign policy, this article re-examines it by broadening the scope of analysis not only to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to 'Mass Economy' and 'Global Democracy.' The results show that his philosophy of peace is not limited to inter-Korean relations or national security, but encompasses various levels such as the social community at the national level and the human community at the global level. The peace he posited was a non-violent control over and controlled state of various forms of violence, ranging from mental and physical harm, structural expropriation and oppression, cultural, religious, and racial discrimination, and the destruction of nature. In order to achieve peace, he emphasized that the spread of a democratic market economy, the cultivation of communitarian virtues, and the expansion of reconceptualized democracy at the human level were essential. For Kim Dae-Jung, peace does not exist a priori, but is something we all have to prepare and create.

Key Words | Kim Dae-Jung, Peace, Democratic Market Economy, Communitarian Virtue, Global Democracy